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문제의 정치경제학*

이 상 호**

〈 目 次 〉

- I. 서론
- II. 신멜더스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 III.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문제
- IV. 결론

I. 서론

현재 생태계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생존과 인간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S. Moscovici(1982, pp. 13-14)는 이런 위기를 20세기 근본문제로 이해하며 E. Morin(1991)은 철기문명의 파괴성에 빗대어 20세기를 ‘지구 철기시대’(l'âge de fer planétaire)라 명명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생태계 위기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산물이다.¹⁾ 자본주의는 제3세계를 식민화시키고 전세계를 산업화시키면서 전세계적인 생태계 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J. P. Deléage, 1991, pp. 268, 294-295)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요약 수정한 것이다. 이 글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1) 현대 생태계 위기는 자본주의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사회주의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태계 위기는 양자를 포괄하는 산업문명의 산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호(1995) 참조.

그렇지만 이 글에서 생태계 위기는 자본주의에 국한시켜 설명할 것이다. 이는 현재 사회주의가 현실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식민화나 산업화 과정에서 남북관계라는 독특한 불평등 구조를 생산해 냈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식민화시켜서 자원을 약탈하거나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후진국을 원료공급지역, 상품판매지역, 값싼 노동력 공급지역으로 이용했다. 선진국은 이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후진국은 더욱 가난해졌다. 현재 이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생태계 위기와 맞물리면서 선후진국간의 갈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선진국의 환경보호정책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문명에서 경제적, 생태학적 남북관계는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니다. 양자는 모두 동일한 자본축적논리의 산물이다. 선진국은 자본축적논리에 따라 전세계를 지배하면서 후진국에 경제적 빈곤과 생태계 위기를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생태계 위기는 이중적인 남북관계를 야기시켰던 자본축적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평가하고자 한다.²⁾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산업화와 환경의 조화·환경친화적 발전으로 해석되고(P. Streeten, 1992, pp. 459-461; P. Smith, 1992, pp. 282-284; 이정전, 1995) 현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최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생태계 위기는 산업화와 환경의 불균형 문제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는 바로 신말더스주의(Neo-Malthusian) 관점이다. 신말더스주의는 말더스의 인구이론을 수용해서 현대 생태계 위기를 해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을 지칭한다.³⁾ 신말더스주의자들은 현대 생태계 위기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문제로 이해하고 후자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지 않고 자연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축적논리를 정당화시키고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은폐시킨다. 필자는 브룬트란트 보고서도 이런 관점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신

2) 이 개념은 1987년 WCED에서 발간한 Our Common Future(Brundtland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1992년 리오선언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전세계에 천명했다. 그런데 리오선언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브룬트란트 보고서보다 내용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된다.

3) 신말더스주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로마클럽과 하딘(G. Hardin)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맬더스주의의 완성형태로 정의하고⁴⁾ 그것이 현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신맬더스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서 그것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이중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신맬더스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1. 맬더스의 인구이론과 신맬더스주의

신맬더스주의자들은 맬더스의 인구이론에서 출발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T. R. Malthus(1958, pp. 153-157)는 인구증가율과 식량증가율의 균형관계를 중시한다. 그는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인간의 욕망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렬한 것으로 이해하고 성욕을 그 다음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면 성욕이 가장 강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성욕은 정열(passion)에서 나오며 그것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과용되기 쉽다. 맬더스(앞의 책, pp. 6-19)는 성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인구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그에 따르면, 인구억제 방식은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자발적인 산아제한(preventive check)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 방식은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통해서 식량증가율에 맞추어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이다.⁵⁾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인구가 조절되는 사회를 ‘자연적으로 건강한’(naturally healthy) 사회라 부른다.

이렇게 볼 때, 맬더스의 인구이론에서 생태계-인간과 자연의 상관성-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관계로 정의된다. 여기서 인구증가와 식량생산문제는 각각 생물학적 욕구와 물리적인 자연법칙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양자의 균

4)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보고서가 여전히 신맬더스주의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뒤에 서술할 것이다.

5) 맬더스는 이 방식을 다시 도덕적 제한(moral restraint)과 악의 제한(vice restraint)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적절한 결혼관습을 통해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조혼을 금지해서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형, 불균형 관계는 자연적이며 양적인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맬더스는 인간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인구와 식량의 자연적인 균형관계를 자각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간의 욕구(성욕)를 억제하면 인구와 식량의 균형관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발적인 인구억제요인은 이런 추론능력의 산물이다.

맬더스는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생태계 위기를 언급한 적이 없지만 신맬더스주의자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생태계 위기를 해석한다. 그래서 이들은 균형상태를 강조한다.(N. Georgescu-Roegen, 1976, pp. 23-25) 이들은 생태계 위기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문제로 이해하며 인간의 욕구를 자연적인 본능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이 욕구가 무한히 확장되면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것이 생태계 위기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이 불균형 관계는 두가지 변수들의 양적 불균형이다. 결국 이들도 맬더스처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을 자연적인 관계이자 양적인 관계로 해석한다. 맬더스와 달리 신맬더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한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를 성욕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개발욕구, 소비욕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자연환경을 식량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적 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들은 생태계 위기를 산업화, 인구, 식량, 자원, 에너지의 불균형관계로 이해한다. 그런데 산업화와 인구는 인간의 욕구의 산물이며 식량, 자원, 에너지는 자연환경과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생태계 위기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관계로 보는 것이다. 단지 이들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을 맬더스에 비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로마클럽은 생태계 위기를 지구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켰다. 이 클럽은 1960년대 서구 사회의 생태계 위기에서 출발한다. 당시 서구사회에선 각종 생태계 문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낙관적인 경제발전관이 비판되기 시작했으며 로마클럽은 이런 분위기에서 결성되었다. 이 클럽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무한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강조한다. 이 클럽은 과도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 때문에 이런 균형관계가 파괴되면서 식량부족과 자원낭비 현상이 나타나며 그것이 생태계 위기를 낳는다고 주장한다.(P. Braillard, 1982, p. 11)

로마클럽은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이 동반되는 경제구조가 지속되면 인류가 미래에 파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도한 인구성장

과 경제성장은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클럽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경제성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앞의 책, pp. 58-59) 그런데 이런 성장방식은 ‘인간의 지구에 대한 책임성’을 전제하는데, 후자는 인간이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통해서 산업화, 인구, 환경의 균형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앞의 책, pp. 68-69) 이 클럽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성장방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적 대안이며 합리적인 성장방식이다.(C. Perrings, 1987, p. 160)

더구나 이 클럽은 생태계 위기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새로운 국제유대관계를 강조한다. 이 클럽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이미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제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태계 위기도 세계적인 문제이며 오직 세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클럽은 국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서 경제, 생태계, 문화, 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세계통합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클럽은 오직 이런 상황에서만 생태계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P. Brailard, 1982, pp. 102-104)

G. Hardin(1968)은 신맬더스주의자 중에서 가장 맬더스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특히 인구와 자원의 균형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구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모든 오염문제를 인구증가의 산물로 이해한다.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관계가 나타나면서 반드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구억제를 생태계 위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인구억제 방식 중에서 도덕률을 신장시켜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바로 맬더스의 자발적인 인구억제요인을 의미한다.⁶⁾

하딘은 이 균형관계를 ‘현재’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현재세대가 생태계 위기

6) 이 밖에도 많은 신맬더스주의자들이 생태계 위기 원인을 인구증가로 이해한다. J. M. Culbertson(1989)과 A. A. Bartlett(1994)은 생태계 위기의 핵심을 인구문제로 정의하고 환경의 수용능력에 맞도록 인구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G. K. Heilig(1994)는 인구성장을 온실효과의 원인으로 취급한다. H. E. Daly(1991, pp. 257-262)는 인구문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결시킨다. 그는 최적 인구(optimal population)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긴다.

를 야기시키면 미래세대는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한 도덕률을 통해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G. Hardin, 1968, pp. 1244-1245; C. J. Bajema, 1991, pp. 205-206) 이 도덕률은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통해서 인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행위준칙이다. 그는 이런 도덕률을 통해 미래의 균형상태(인구와 자연환경의 균형)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로마클럽과 하딘은 합리적 추론능력이나 윤리적 행위준칙을 통해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지구에 대한 책임성’이나 ‘현재세대의 미래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면서 새롭게 인류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성장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이들은 합리적 추론 능력과 윤리적 행위준칙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맬더스주의

로마클럽이나 하딘과 달리 Brundtland 보고서는 단순히 합리적 추론능력이나 윤리적 행위준칙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시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신맬더스주의의 완성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신맬더스주의로 분류하진 않는다. 신맬더스주의자인 A. A. Bartlett(1994, pp. 9-10)는 이 보고서가 인구 성장과 경제발전의 갈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구문제를 생태계 위기의 주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D. Tabutin / E. Thiltgès(1992)은 이 보고서를 신맬더스주의와 구분한다. 이들은 후자가 인구문제만을 강조하는데 비해 전자가 인구와 빈곤문제를 연결시키고 빈곤을 환경파괴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급한다고 본다. 심지어 D. I. Roussopoulos(1993, p. 117)는 이 보고서를 생태사회주의로 분류한다. 여기서 생태 사회주의는 환경운동과 민주사회주의를 결합시키고 환경입법이나 국제조약을 강조하는 관점을 지칭한다.

사실상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인구성장 동학과 연결시키고 “인구규모가

생태계의 생산역량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층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WCED, 1987, p. 56)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다른 신멜더스주의자들과 달리 인구성장동학을 인구규모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적 빈곤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진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보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지구의 자원을 더 파괴하며 한 국가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력에 따라 에너지나 원료의 소비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앞의 책, p. 56)

그러나 신멜더스주의는 단순히 인구억제를 주장하는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구억제를 강조하고 이런 불균형 관계를 생태계 위기로 이해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구를 본능차원에서 이해하며 자연환경을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을 자연적인 양적 관계로 취급한다. 더구나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자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조절한다면 산업화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신멜더스주의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환경자원 토대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선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성장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p. 1) 새로운 성장이 곧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확보해서 산업화와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다른 신멜더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와 물리적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중시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충족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앞의 책, p. 43)으로 정의한다.

물론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인간의 욕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에 일차적인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앞의 책, p. 43) 그러나 이를 빈곤에 대한 사회경제적 해석으로 오해해선 안된다. 단지 이 보고서는 빈곤을 욕구에 비해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해할 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더욱 더 파괴하게 되며 이는 다시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결국 이 보고서는 빈곤을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문제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범주와 생태계 위기의 상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상관성을 다시 자연적인 불균형문제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여전히 신맬더스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환경과 경제발전의 상관성을 해명하고 기존의 경제발전전략을 비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은 빈곤계층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했다. 또한 그것은 장기적으로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지속시킬 수 없는 것('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발전전략이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구 전체를 진보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며 그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동시에 해당된다.(앞의 책, p. 4) 이와 같이 이 보고서는 환경과 발전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일 환경자원이 파괴되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며 경제성장이 환경파괴비용을 초월한다면 환경이 보호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빈곤을 자연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또한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생태계 위기가 매우 복잡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관계, 초국가적인 생태계를 통해서 환경과 경제발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앞의 책, pp. 37-39)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정책과 발전전략을 통합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발전'을 경제와 사회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미래세대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개발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서 제3세계의 빈곤과 저발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기존의 국제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무역, 자본, 기술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관계로 재편하는 것이다.(앞의 책, pp. 40-41)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생물종 보존문제, 유전자 자원 보존문제, 에너지문제, 공업발전문제, 인간의 주거문제를 상호연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생물종과 생태계는 미래의 자원(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취급된다.(앞의 책, pp. 11-17)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자원개발, 투자방향, 기술발전 방향, 제도변화를 통해서 현재세대

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의 잠재역량을 신장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앞의 책, p. 46)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이런 발전전략의 목표를 인간과 인간, 인류전체와 자연의 균형과 조화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를 모두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p. 65)

이처럼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가장 중시하며 모든 것을 이 관계로 환원시켜 설명한다. 여기서 생태계는 오직 인간의 욕구충족과 욕구충족 대상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 보고서는 다른 신멜더스주의자들과 달리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궁극적으로(제도, 정치, 사회, 국제관계의 변화를 포괄하는) 정치영역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지만(앞의 책, p. 9) 이는 문제영역의 확장이지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정치영역-예를 들면, 환경법-을 단순히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를 확보해서 산업화와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방식이다.

더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지속 불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신멜더스주의자처럼 인간의 합리적 추론능력을 전제한다.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의 지속 가능성,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이런 균형관계는 인간의 욕구를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에 적합하도록 조절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소위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전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회’, ‘현재세대의 욕구와 미래세대의 욕구가 조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보고서가 신멜더스주의 관점을 정치영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멜더스주의의 완성형태로 정의한다.

현재 신멜더스주의자들은 이 보고서를 수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태계 위기에 대한 최적 대안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이 개념을 약간씩 다르게 이해하면서도 한결같이 그것을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 산업화와 환경

의 균형관계로 해석한다.⁷⁾ J. A. Souder /S. K. Fairfax /L. Ruth(1994, pp. 273-275)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물리적, 경제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자연자원을 물리적으로 지속시키고 자원 생산의 경제적 생산성을 지속시키면서 다양한 생물학 체계와 사회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P. Utting(1994, p. 232)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반비례 관계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환경정책이 거시적 일관성과 미시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전자는 환경보호정책과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후자는 지역주민의 권리, 욕구, 우선권을 환경보호문제와 통합시키는 것이다.

J. C. J. M. Van den Bergh /P. Nijkamp(1990-1991, p. 191)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체계와 생태계의 질적, 양적 균형문제로 이해한다. 이들은 이에 기초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제시한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탈지역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립가능해야만 한다.

A. Savory(1994)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자원관리 방식과 연결시킨다. 그는 ‘전체론적 자원관리’(holistic Resource Management)방식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인간, 토지, 자본을 하나의 전체로 취급해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산업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서 현재세대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도 현재세대와 동일한 정도로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의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신멜더스주의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 산업화와 환경의 균형으로 해석한다. ‘거시적, 미시적 일관성’은 경제개

7) 신멜더스주의는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고전과 환경 경제학과 구별된다. 후자는 환경문제를 소위 ‘외부효과’로 해석하고 이를 시장 메카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달리 전자는 시장 메카니즘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환경법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발전’(균형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본적으로 후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인간과 자연의 균형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오직 외부효과와 내부화나 시장 메카니즘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신고전과 경제학자인 T. Panayotou(1993)는 매우 특이하게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장 메카니즘과 연결시킨다. 그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해서 환경문제라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책과 환경보호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여기서 '조화'는 경제변수와 환경변수의 균형관계를 지칭한다. '전체론적 자원관리방식'은 도시와 농촌, 인간, 토지, 자본의 균형과 비례관계를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이런 균형관계를 통해서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Ⅲ.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문제

1. 자본주의와 생태계 위기

앞서 보았듯이, 신멜더스주의자들은 생태계를 자연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이들에 따르면, 생태계는 인간의 욕구와 물리적 자연환경이 맺고 있는 양적 관계를 지칭한다. 여기서 인간의 욕구는 소비욕구나 성욕, 개발욕구를 의미한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초역사적, 초사회적인 본능일 뿐, 사회관계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인구나 경제가 물리적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초월해서 성장하게 되며 여기서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즉 산업화, 인구, 자연환경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생태계 위기는 이런 불균형의 산물이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발전전략을 '지속 불가능한 발전'전략으로 해석한다. 이와 달리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연환경에 적합한 개발방식이자 자연환경에 적합한 인구통제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조절하면서 산업화, 인구, 자연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생태계 위기는 자연적인 양적 불균형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아울러 생태계 자체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우선 생태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생태계에서 인간은 자연 자체와 관계맺지 않는다. N. Georgescu-Roegen(1976, p. 25)에 따르면, 인간은 유기체중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는 오직 인간만이 내신체 기구(endosomatic instruments)와 외신체 기구(exosomatic instruments)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는 유기체 자체의 신체기관(팔, 다리, 날개, 발톱 등)을 지칭하며 후자는 유기체 외부의 신체기관

(노예, 생산수단, 노동자 등)을 지칭한다. 그런데 노예, 생산수단, 노동자는 이미 특별한 사회관계나 생산수준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외신체 기구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관계이다. 인간은 이런 외신체 기구를 통해서 자연과 질료 및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자연을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변형시킨다.

따라서 생태계는 고정된 양적 관계나 균형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항상 가변적이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외부에 주어진 독립변수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과정에서 항상 독특한 자연상태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자연사(史)는 특수한 인간사(史)이다. (J. -P. Deléage, 1991, p. 245) 그래서 S. Moscovici(1972, pp. 382-385)는 자연세계를 이미 인간화된 것-사회화된 것-으로 이해한다.⁸⁾ 그렇다면 생태계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생산수단과 사회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인간과 인간화된 자연의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관계이다.

더구나 인간은 자연환경을 인간화, 사회화시키면서 자신의 욕구체계를 변형시킨다. 새로운 생산수단이 출현하면 자연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욕구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구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이다. (H. W. Pearson, 1957) 생태계의 사회성, 역사성은 항상 욕구의 사회성, 역사성을 포함한다.

또한 인간은 생태계에서 자연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을 변형시키면서 생활하지만 결코 자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독립영양체(autotroph)인 식물이 만들어 낸 영양분에 의존하는 종속영양체(heterotroph)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 O. Odum, 1975, pp. 21-27) 인간은 영양분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매순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E. Morin(1980, p. 212)은 인간의 자율성을 영양분의 종속성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가 볼 때, 인간의 자율성은 이런 종속성과 의존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인간이 자연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변형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죽어 부패하면서 자연의 먹이로 전환된다고 본다.

8) 심지어 그는 남미의 초원지대(프레리)조차 인간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숲이었지만 인간이 사육하던 가축떼가 지나가면서 초원지대로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는 이중적인 관계를 지닌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연을 인간화, 사회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태계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런 생태계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특정한 생산수단과 사회관계를 통해 자연을 지배 변형시키면서 자신의 생존근거를 확보하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 그렇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생존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문명 이전까지 인간은 생태계의 이중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당시 인간은 주로 농업이나 목축업을 기반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변형시키면서도 자연환경에 의존해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문명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이중성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자본주의는 사회문제를 경제문제로 환원시키고 경제성장을 사회진보로 취급했다.⁹⁾ 그것은 독특한 생산수단(과학기술과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무한히 자연을 변형시키고 지배했으며 독특한 사회관계(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더욱 성장시켰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오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취급되었을 뿐, 인간이 자연환경에 의존한다는 측면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심지어 자본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확대재생산되었으며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생존근거를 확보했다. 자본간 경쟁관계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자본은 죽은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인간의 욕구체계를 완전히 변형시켰다. 자본주의 이전까지 인간의 욕구체계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규제나 자연제약 조건을 통해 조절되고 통제되었지만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이런 욕구체계를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문제로 전환시켰다. 이제 개인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포드주의 생산방식이 등장하면서 개인주의적 욕구체계는 더욱 확대되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결합시켜서 대중소비시대를 만들어냈으며 광고를 통해서 끊임 없이 새로운 욕구를 창출했다. 이는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산업문명에서 자본축적은 곧 생태계 위기를 의미한다.

9) 현재 이런 관점은 경제지상주의, 생산력주의, 경제환원론, 성장지상주의로 평가된다.

그래서 E. Altvater(1987, pp. 41-45; 1991, pp. 261-266)는 자본주의에서 경제 법칙과 생태계가 모순관계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생산력은 생태계 파괴력”(E. Altvater, 1991, p. 268)이라 단언한다. 그렇다면 현대 생태계 위기는 단순히 자연적인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특정한 생산수단과 사회 관계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와 오염으로 이끄는 사회구조의 문제이다.(D. Tabutin/E. Thiltgès, 1992; P. Brailard, 1982, p. 121)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나 생태계 위기가 특정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면, ‘지속 가능한 발전’ 역시 새로운 사회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F. G. Hayden, 1993; D. Ghai, 1994)

2. 남북문제의 이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

자본주의 산업문명은 경제성장수준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 합리성과 비합리성,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서구 선진국(근대사회, 합리성)이 후진국(전근대 사회, 비합리성)을 근대화, 합리화, 서구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약탈했으며 여기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한 남북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관계와 함께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관계이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후진국을 원료공급지나 값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이용하면서 후진국에 경제적 불평등을 강요하고 후진국의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경제문제와 생태계 문제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¹⁰⁾(L. Mármora, 1992; A. Ruellan, 1993)

그런데 후진국에서 생태계 위기와 빈곤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생태계 위기는 개발가능한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자원개발비용을 상승시키면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 또한 후진국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정책을 실시하지만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자연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0) L. Mármora(1992, ss. 41-42)는 1980년대 이후에 전통적인 남북관계가 변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후진국은 선진국의 착취대상(원료공급지역, 상품판매지역, 자본투자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 이후 원료수입, 상품판매, 자본투자면에서 선진국간의 교역비중이 상승했다고 본다. 그는 이제 후진국이 단지 선진국의 오염산업의 이전대상으로 전화되었다고 본다.

후진국은 빈곤과 생태계 위기의 악순환에 놓여있는 것이다. E. Altvater (1991:282-283)는 1980년대 남미경제의 채무위기를 분석하면서 채무위기, 경제위기, 생태계 위기의 상관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신멜더스주의자들은 현대 생태계 위기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지 못한다. 게다가 이들은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보지 못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생태계의 사회성, 역사성을 보지 못하고 생태계를 자연적인 의미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태계 위기를 단순히 자연적인 양적 불균형 문제로 이해한다. 물론 신멜더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구가 증가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당연히 생태계가 더욱 파괴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구증가도 사회적, 역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제3세계의 빈곤과 생태계 위기를 단순히 불균형 문제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D. H. Stott(1969, pp. 102-104)와 S. Latouche(1993, p. 222)는 제3세계의 인구폭발 문제를 전통사회의 해체와 연결시킨다. 이들은 제3세계가 근대화, 서구화되면서 전통적인 사회문화가 파괴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출생률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사회구조, 제도, 문화도 파괴되었다고 본다. 또한 A. Bandarage (1994)는 현대사회에서 제3세계의 인구증가와 선진국의 인구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산업자본주의와 서구제국주의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은 지난 500년 동안 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자본집약적인 공업으로 국내 산업구조를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생률을 감소시켰지만 제3세계의 인구를 증가시켰다. 유럽의 자본가들은 식민지에 사유재산권을 도입하고 단작수출경제를 확립하면서 원주민들에게서 토지와 자연자원을 강탈하고 이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했다. 여기서 식민지 노동자들은 노동력 자체가 유일한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식민지 지역에 근대 의료기술이 수입되면서 인구가 더욱 증가했다. 제3세계지역은 식민지 독립 이후에 인구 폭발문제를 특히 심각한 과제로 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제3세계의 인구폭발문제를 자본주의와 근대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제3세계의 빈곤은 인구증가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불평등한 남북관계의 산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세계 생태계 위기나 전세계 생태계 위기도 인구증가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물론 신멜

더스주의자들이 모두 인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생태계 위기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관계로 이해하며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을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이 본능적인 욕구(성욕, 소비욕구, 개발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신맬더스주의자들은 생태계 위기를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서 불평등한 남북관계까지 자연적인 의미로 정당화시킨다. 이는 이미 맬더스에 제시 시작된 것이다. T. R. Malthus(1958, pp. 335-340)는 인구와 식량의 관계를 통해서 하층계급의 빈곤 원인을 해명한다. 그에 따르면, 하층계급은 비합리적인 생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량수준에 따라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하층계급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¹¹⁾ 이처럼 그는 빈곤을 사회 경제적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법의 산물로 취급하면서 불평등한 사회현실을 정당화시킨다. 그렇지만 이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R. Meek, 1986)¹²⁾

이와 마찬가지로 신맬더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정당화시킨다. P. Braillard(1982:83-85, 92-94, 104-106)는 로마클럽을 정치적 보수주의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로마클럽은 기존 국제질서를 인구나 물리적 생태계 위기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면서 선후진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정치적 갈등구조를 무시한다. T. Benton(1994:33-38)은 이 클럽이 현존하는 인간문화와 지배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조건을 확보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본다. 하딘이나 브룬틀란트 보고서도 이와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P. Smith(1992, p. 284)는 브룬틀란트 보고서를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무시한 선진국 중심의 대안으로 평가한다. J. -P. Garnier(1994: 67)는 이 보고서가 자본주의를 영원한 것으로 전제하고 자본주의적 착취관계

11) 맬더스가 합리적인 생활습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는 '신중한 생활습관'(prud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쾌락을 참고 견디는 생활습관으로 정의한다.(앞의 책, p. 215)

12) J. A. Schumpeter(1954, pp. 578-581)도 맬더스의 인구원칙을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맬더스는 사회개량주의들과 논쟁하면서 인구원칙을 사회개량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했지만 인구원칙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단지 존재하지도 않는 법칙효과를 예증하기 위해 사실자료들을 편의적으로 나열했다.

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자연조건의 지속 가능성만을 분석한다고 비판한다.¹³⁾

이처럼 신맬더스주의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치경제적 불평등관계를 무시하고 지구 공동운명체나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균형관계’만을 강조한다. 이는 생태계 위기에 내포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존의 정치, 경제적 남북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인류공동체만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신맬더스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은 선진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지속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증가시킬 것이다. 선진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통해서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억제시키고 발전된 환경기술을 통해서 더욱 더 남북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대 생태계 위기를 잘못 이해한 데 그치지 않고 독특한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불평등한 자본축적 구조를 은폐시키면서 선진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지속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이와 같이 신맬더스주의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생태계 위기와 자본주의의 상관성을 무시한다. 이들은 현대 생태계 위기를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의 불균형 문제로 잘못 해석하며 이를 통해서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독특한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선후진국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런 구조와 연결된 선후진국간의 생태학적 갈등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선진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후진국에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모든 위기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진정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현대 생태계 위기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자본주의는 자본축적과정에서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생

13) 이는 리오회의에서 여지없이 확인된다. A. Lipietz(1993, pp. 95-98)는 리오협정에서 선진국 중심의 이기주의 때문에 선진국의 책임성이 방기된 채, 후진국의 개발욕구만이 억압되었다고 주장한다.

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본축적 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은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축적논리가 지속되는 한,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나 생태계 위기는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축적논리나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장기에 걸친 작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생태계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전 세계 인류를 명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경제가 양립가능한 경제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위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생태계 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은 비용이나 기술을 후진국에 무상으로 양도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선진국이 환경기술이나 환경상품을 새로운 이윤창출도구로 이용할 경우, 후진국은 더욱 더 가난해질 것이며 전세계적인 생태계 위기도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단기적인 작업들은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자본축적논리와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재편시키는 과제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생태계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태계에 국한된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현대 생태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수 없다. 항시 장기적인 대안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단기적인 처방이 실시되어야 후자도 완전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Altvater, E. (1987), "Ökologische und ökonomische Modalitäten von Zeit und Raum", *Prokla*, Heft 67.
2. _____ (1991), *Die Zukunft des Marktes*,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Münster.
3. Bajema, C. J. (1991), "Garrett James Hardin: Ecologist, Educator, Ethicist and Environmentalist", *Population and Environment*, 12(3).
4. Bandarage, A. (1994), "Population and Development: Toward a Social Justice Agenda", *Monthly Review*, September.

5. Bartlett, A. A. (1994), “Reflectoons on Sustainability, Population Growth, and the Environment”, *Population and Environment*, 16(1).
6. Benton, T. (1994), “Biology and Social Theory in the Environmental Devate” ;in M. Redclift /T. Benton(ed.), *Social Theory and The Global Environment*, Routledge, London /New York.
7. Braillard, P. (1982), *L’Imposture du Club de Ro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8. Culbertson, J. M. (1989), “Economic Growth,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Population and Environment*, 11(2).
9. Daly, H. E. (1991), “Population and Economics: A Bioeconomic Analysis”, *Population and Environment*, 12(3).
10. Deléage, J. -P. (1991), *Histoire de l’écologie*, La Découverte, Paris.
11. Garnier, J. -P. (1994), “L’écologisme: paradigme des temps futurs ou paravent pour le temps présent?”, *L’homme et la société*, No. 113.
12. Georgescu-Roegen, N. (1976), *Energy and Economic Myths*, Pergamon press Inc., New York.
13. Ghai, D. (1994), “Environment, Livelihood and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25(1).
14.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3859).
15. Heilig, G. K. (1994), “The Greenhouse Gas Methane(CH₄): Sources and Sinks, Impact of Population Growth, Pollible Intervention”, *Population and Environment*, 16(2).
16. Latouche, S. (1993), *In the Wake of the Affluent Society*, (trans. by M. O’cornor /R. Arnoux), Zed Books Ltd, London.
17. Lipietz, A. (1993), *Vert espérance*, la Decouverte, Paris.
18. Malthus, T. R. (1958), *An Essay on Population*, J. M. Dent & Sons, London.
19. Mármora, L.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im Nord-Süd-Konflikt: Vom Konzept der Umverteilung des Reichtums zu den Erfordernissen einer globalen Gerechtigkeit”, *Prokla*, Heft 86.

20. Meek, R. (1986), "Malthus - Yesterday and Today":in J. C. 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 Critical Assements*, Vol. I, Croom Helm, London.
21. Morin, E. (1980), *La Méthode-2. La vie de la vie*, Seuil.
22. _____ (1991), "L'âge de fer planétaire":in E. Morin /J. Bocchi /M. Ceruti, *Un Nouveau Commencement*, Seuil, Paris.
23. Moscovici, S. (1972), *La Société contre Nature*, Union Generale d' Editions, Paris.
24. _____ (1982), *Versuch über die menschliche Geschichte der Natur*, (übersetzt von M. Bischoff), Suhrkamp.
25. Odum, E. O. (1975), *Ecology*,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26. Panayotou, T. (1993), *Green Markets - The Econo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San Francisco.
27. Pearson, H. W(1957) "The Economy has No Surplus: Critique of A Theory of Development":in K. Polanyi /C. M. Arensberg /H. W. Pearson,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The Free Press, New York.
28. Perrings, C. (1987), *Economy and Environment*, Cambridge Univ.
29. Roussopoulos, D. I. (1993), *Political Ecology*, Montréal /New York / London.
30. Ruellan, A. (1993), "Recherche Scientifique et Environnement", *Raison Présente*, No. 106.
31. Savory, A. (1994), "Will We Be Able to Sustain Civilization?", *Population and Environment*, 16(2).
32. Smith, P. (1992), "Industrialization and Environment":in T. Hewitt / H. Johnson /D. Wield(ed.),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
33. Souder, J. A. /Fairfax, S. K. /Ruth, L. (1994), "Sustainable Resources Management and State School Lands: The Quest For Guiding Principles",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34.

34. Stott, D. H. (1969), “Cultural and Natural Checks on Population Growth” ;in A. P. Vayda(ed.), *Environment and Cultural Behavior*, Univ. of Texas, Austin.
35. Streeten, P. (1992), “Des Institutions pour un Développement durable”, *Revue Tiers Monde*, 33(130).
36. Tabutin, D. /Thiltgès ,E. (1992), “Relations entre Croissance Démographique et Environnement-du Doctrinalà L’Empirique”, *Revue Tiers Monde*, 33(130).
37. Utting, P. (1994),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entral America”, *Development and Change*, 25(1).
38. Van den Bergh, J. C. J. M. /Nijkamp, P. (1990-1991), “A Dynamic Economic-Ecological Model for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20(3).
39.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
40. 이상호(1995), “신고전과 경제합리성의 한계와 생태학적 경제관-한계혁명과 희소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1. 이정전 편(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